주민 불편 해소… 경기도,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

공익사업으로 전통예식 중단돼 체육시설 설치시 도계위 심의 간소 "불합리한 규제, 발굴·개선할 것"

도시개발사업, 도로 등 공익사업으 로기존의 사당이 철거되면 개발제한구 역 내 종중의 사당 신축이 불가능했던 불편이 해소됐다.

시장•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 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 활체육시설은 시•군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.

경기도는 1일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 기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'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'이 개 정·공포됐다고 밝혔다. 시행령은 공포 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.

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



경기도청

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 우 이전·설치가 가능해지고, 시·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때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됐다.

개발제한구역내사당은당초설치주 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 이 가능했지만 2009년 8월 마을공동으 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됐었다.

도시개발사업, 도로 등 공익사업으 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면 종중에서 사 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치 러 왔던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.

1990년대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은 각각 의왕 장 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조 성사업 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 다. 하지만 철거 뒤 신축이 불가하게 돼 각종 전통제례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민원이 발생했었다.

시장・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 가활동을 위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 설 설치 때 시•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데도 시·도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 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 제가 있었다.

도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도개선 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,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 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.

경기도 관계자는 "개발제한구역 불 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과 병행하 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 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 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 개선하겠다"고 전했다.

한편,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법시행령에는개발제한구역훼손지정 비사업 관련 ▲밀집훼손지 규모요건 완 화(1만m² 이상→3000m² 이상 결합) ▲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(2016년 3월30일 이전 설치→허가) ▲밀집훼손 지 내 임야 포함 허용(5% 이내) ▲공 원·녹지 기부 완화(조성→원상복구) ▲ 사업절차 간소화(GB관리계획 수립→ 국토부 협의) ▲사업방식 확대(도시개 발사업 환지방식→수용, 혼합방식 포 함)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.

/수원(경기)=김승열 기자 kimsy@metroseoul.co.kr

국내 최대 무인도 '선미도', 이달의 무인도서

별칭은 '덕적도의 예쁜 꼬리' 무인섬 중 가장 높은 위치의 등대

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서인 '선미도'가 10월 무인도서로 선정됐다. 선미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에 있다.

총면적 129만114m², 해안선 길이 7k m에 이르는 국내 최대 무인도서다. 인 천과는 37km 떨어져 있지만 인근 유인 도인 덕적도 능동자갈해변과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다.

선미도는 '덕적도의 예쁜 꼬리'라는 별칭을 가졌다. 본래 명칭은 '악험도(惡 險島)'였다. 섬 생김새가 험악한데다가 섬 주변 바다 또한 거칠어서 붙은 이름 이다.

섬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전설도 있 다. 왕비의 질투로 유배돼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진 궁녀의 영혼이 내린 저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여긴 섬 주변 사람들이 제를 지내고 선을 베풀 라는 뜻에서 '선미도(善尾島)'라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다.

선미도는 등대섬으로도 유명하다.

선미도등대는 우리나라 무인도서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등대다. 1934년 10 월1일 최초로 불을 밝힌 이래 85년간 밤 바다를 지켜왔다.

2003년 12월에는 구 등대를 철거하



10월의 무인도서로 인천 '선미도' 선정./해수부

고 그 자리에 19.4m의 새 등탑을 세운 바 있다.

선미도를 방문하려면 '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'을 통해 인천광역시 덕적도 행 여객선을 예약해 이동한 뒤 덕적도 에서 낚시어선 등을 타고 40여 분간 들 어가면 된다.

한편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 리기위해 2017년 8월부터 '이달의 무인 도서'를 선정해왔다. 지난달에는 충청 남도 보령에 위치한 '석대도'를 선정했 다.

/인천=최영주 기자 choiyj@

'적절성 논란' 광주시 공무원 체육대회 무산

소통ㆍ친목도모 전직원 체육대회 이용섭 "현행대로 실·국별로 진행"

이용섭 광주시장이 소통과 친목도모 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.

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정례조회에 서 "가을 체육 행사는 다수 직원의 뜻에 따라 현행대로 실·국별로 진행해달라"

이 시장은 "짧은 기간에 놀랄만한 성 과를 창출하느라 지친 직원과 그 가족 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라도 행복 하게 하고 친목 증진과 추억을 만들려 고 행사를 추진했다. 그러나 반대가 더 많은 설문 조사가 나와 아쉬운 마음이

있지만 실·국별로 진행해달라"고 당부 했다.

광주시가 지난달 26~27일 전 직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이 45.1%, 반대가 54.9%로 나왔다.

시는 22일 언론 보도로 개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론조사를 해 개 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.

광주시는 19일 광주서구상무시민공 원(잠정)에서 2200여명의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었다.

그동안 실·국별 체육대회는 있었지 만, 지난 10년간 전 직원이 모인 체육대 회는 이번이 처음이다.

전 직원 체육대회는 이 시장이 '광주 형 일자리' 합작법인 대표이사로 선임

한 박광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3차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시는8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고일 부인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. 의회 는 도시철도 2호선, '광주형 일자리', 민 간공원 특례사업 등 현안 사업이 급박하 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 한지 의문이라며 2000만원을 삭감했다.

이 시장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를 받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 없 는 추진을 당부했다.

이 시장은 "압력이나 특혜가 있을 수 없다. 검찰이 수사해 사실이 밝혀질 것 으로 기대한다"며 "수사 결과를 예단해 결론을 내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"고 강조했다.

/광주=차정준 기자 cc6311@

강풍에 무너진 수원 보호수, 후계목 증식 성공 경기도, 지방세 체납자

수령 500년 넘은 단오어린이공원 나무 1982년 10월 수원 11호 보호수 지정

지난해 여름 장맛비에 큰 가지 4개가 부러진수령 500년 넘은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가 새로운 생명을 키워냈다.

수원시는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 느 티나무(수원 11호 보호수)의 후계목 20 주 증식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.

나무 높이가 33.4m에 이르는 단오어 린이공원 느티나무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에 첫 장맛비가 내렸을 때 큰 피해 를 보았다. 장맛비와 함께 불어닥친 강풍 에 높이 3m 부분에 자리한 큰 가지 4개 가 한꺼번에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렸다.

이 느티나무는 1982년 10월 수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 5월 '대한민국 보호수 100선(選)'에 선정되 기도 했다.

영통구 영통동 주민들은 매년 단오에 느티나무 주변에서 '영통 청명 단오제' 를 열고 있다. 축제는 청명산 약수터에 서 지내는 '산신제'로 시작돼 느티나무



수원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 느티나무(수원 11호 보호수)의 후계목.

앞 '당산제'로 이어진다.

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느티나무 가 부러지자 수원시는 곧바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보호수 복원에 나섰다.

보호수의 밑동을 보존하고, 밑동에 서 맹아(새로 돋아나는 싹)와 실생묘(씨 앗에서 새로 난 묘목)를 채취해 조직배 양 방식으로 후계목을 증식했다.

현재 30cm 정도 자란 후계목은 수원 시 공원녹지사업소(5주)와 산림환경연 구소(15주)에서 관리중이다.

/수원(경기)=김승열 기자

115명 출국금지 요청

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'체납처분 회피 우려자'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 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

경기도는 "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 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 세정의를 실현하고, 공정한 세상을 만 들어 나가야 한다"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 라고 밝혔다.

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 요청자 65명과 연장 요청자 50명이 포 함됐다.

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 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 여부, 외화거래내역,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 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, 최종 출국금 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.

/수원(경기)=김승열 기자

